

불안한 달러체제와 국제질서 변화

2009.10.9 | 박형준_새사연 연구원 | hjpark@saesayon.org

목 차

1. 인디펜던트지의 흥미로운 보도
2. 달러체제의 붕괴가 중국에 이익인가?
3. 달러화 가치하락이 미국에 불리하기만 한가?
4. 접근하는 틀을 바꿔야



<http://saesayon.org>

1. 인디펜던트지의 흥미로운 보도

최근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서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내보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이 중국, 러시아, 프랑스와 비밀회동을 수차례 가지면서 원유대금을 미국의 달러화로만 결제하는 기존의 원칙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기사인데 이 기사로 인해 국제 금시장이 다시 한 번 술렁거리고 있다. 이 보도가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재미있다” 또한 권력에 대한 암투, 음모, 서스펜스 등 여러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 그것도 선덕여왕처럼 일국적 차원에서 패권싸움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암투이니 스케일이 주는 긴장감이 더해진다.

실제로 보도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세계정치경제 체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내용이다. 관련국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미 금값을 시작으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고 국제적 투자가들도 동요하고 있다. 기사에서처럼 중동 산유국들이 달러의 독점 결제체제를 엔화, 위안화, 유로화, 금 등을 포함한 통화바스켓 제도로 대체한다면 정말로 달러의 지위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갑작스런 달러화 자산의 투매가 벌어져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의 자본주의체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흥미롭긴 하지만, 국제통화체제의 변화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이란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정치경제적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그동안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국은 경제력, 군사력의 비약적 발전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문 중 하나인 국제통화체에서 중국 위안화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흐름은 인디펜던트지의 보도와는 상관없이 진행되어 온 것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과정이 어떤 양상을 띠면서 펼쳐질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2. 달러체제의 붕괴가 중국의 이익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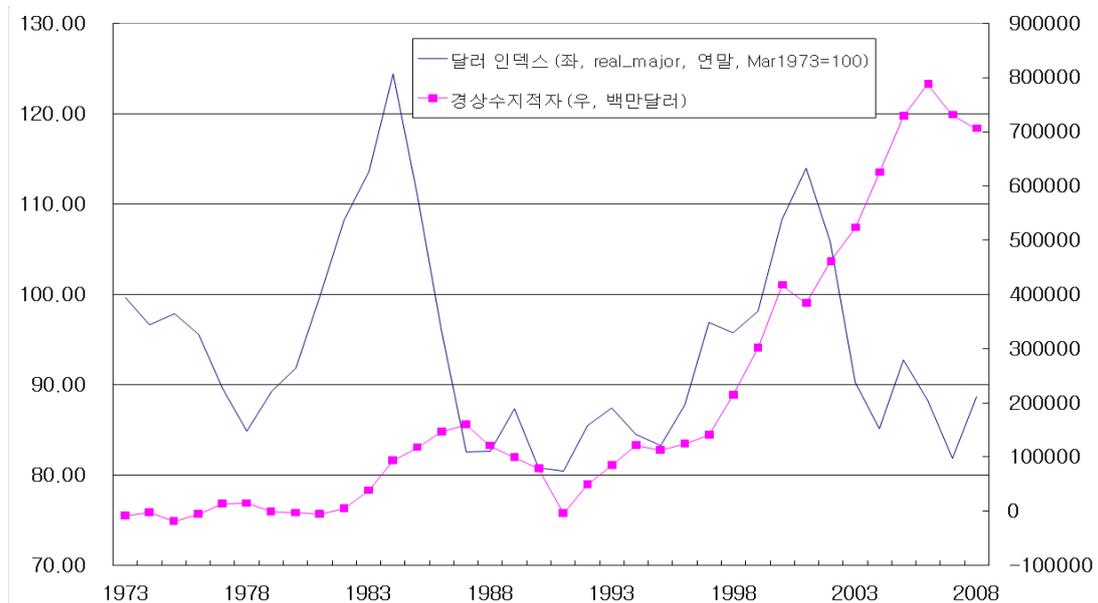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약해지면 중국에 곧바로 이익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아주 천천히 달러중심 국제통화체제가 대안적 체제로 전환될 때만 그렇다. 다시 말해, 연착륙할 때만 그렇다. 중

국은 2조 달러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70퍼센트 이상이 달러화 또는 달러화 표시 유가증권으로 알려져 있다. 달러화가 갑자기 폭락하면 중국 외환보유고 가치 역시 폭락한다. 중국도 이 경우 엄청난 손실을 안게 된다.

달러화의 폭락이 예상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달러화와 달러화 표시 유가증권이 매물로 나오고 이는 다시 달러가치를 폭락시킬 것이다. 참고로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지금까지 발행한 달러화 전체의 70퍼센트 이상이 미국 바깥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런데 달러를 팔고 그 대신 살 수 있는 외환과 외환표시 자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그런 대안이 보이지 않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없다.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등이 미국의 일방적 세계 정치경제질서에 대해 도전하며 다자적 체제로의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급격한 달러화의 몰락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3. 달러화 가치하락이 미국에 불리하기만 한가?

그림 1.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달러화 가치



출처: Bureau of Economic Analysis, FRB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려 왔다. 1984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의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킨 후 잠깐 줄어들긴

했지만, 1990년대부터 다시 적자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왔고, 최근 몇 년간은 연 7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국 GDP의 6퍼센트에 육박한다. 이는 미국이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사용하면서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담으로써 트리핀(Robert Triffin)의 딜레마라고 부른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돈이 해외에 풀려나가야만 되는데, 세계대전 이후 무상원조나 저리의 차관으로 달러를 순환시키기도 했지만, 주요하게는 미국이 자국민들의 엄청난 소비를 통해 야기되는 경상수지 적자를 떠안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반대급부로 기축통화가 주는 지대이익(seigniorage)을 얻으며, 국제정치경제 체제에서 맹주(hegemon)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논리적 딜레마의 수준을 넘어섰다.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적자체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정치경제적 불균형과 불안정을 구조화시켰다.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만큼 달러를 새로 찍어내면 되지만, 미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마냥 달러화를 늘릴 수도 없다. 오스트리아학파에 속하는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달러화 남발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토마스 우즈 주니어, <케인즈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팽창할 때는 미국 내 자산시장의 붐을 일으켜 나간 달러를 재흡수 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이 방법에 의존할 수 없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하는 것은 미국의 골칫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차원의 정치경제적 불균형과 불안정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달러 가치의 하락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여건 형성은 할 수 있다. 미국과 여타 주요국들이 달러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대신 점진적 하락을 유도해 낼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이상적’인 과정을 꿈꿀 수도 있다.

달러가치 하락 → 미국 수출 증대, 수입 감소 → 경상수지 적자 감소 → 외국인 미국 자산시장 투자 요인 감소, 자본유입 감소 → 미국 유가증권 가격 하락 → 이자율 증가세 → 주택, 내구 소비재 구매 및 사업 투자 감소 → 경상수지 적자 해소

물론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국내 소비 위축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투자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불황이 장기화 될 수 있다. 게다가 점진적 가치하락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의 달러화 자산 투매가 벌어지면 견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달러화 가치하락이 무조건 미국에게 부정적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그리고 중국에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중국이 달러화 자산에 투자한 자금을 흡수해 줄만한 대체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국으로 돈을 회수해 갈 수도 없다. 그렇게 하려면, 중국의 내수 소비를 엄청나게 증대시켜야 하고, 미국이 했던 것처럼 자산시장을 확대해서 중국 외부에 있던 돈을 내부에서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엄청난 인플레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면 이들 경제에 주력을 이루는 수출산업이 타격을 입어 체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도 달러화의 급격한 몰락을 바랄 처지에 있지 못하다.

4. 접근하는 틀을 바꿔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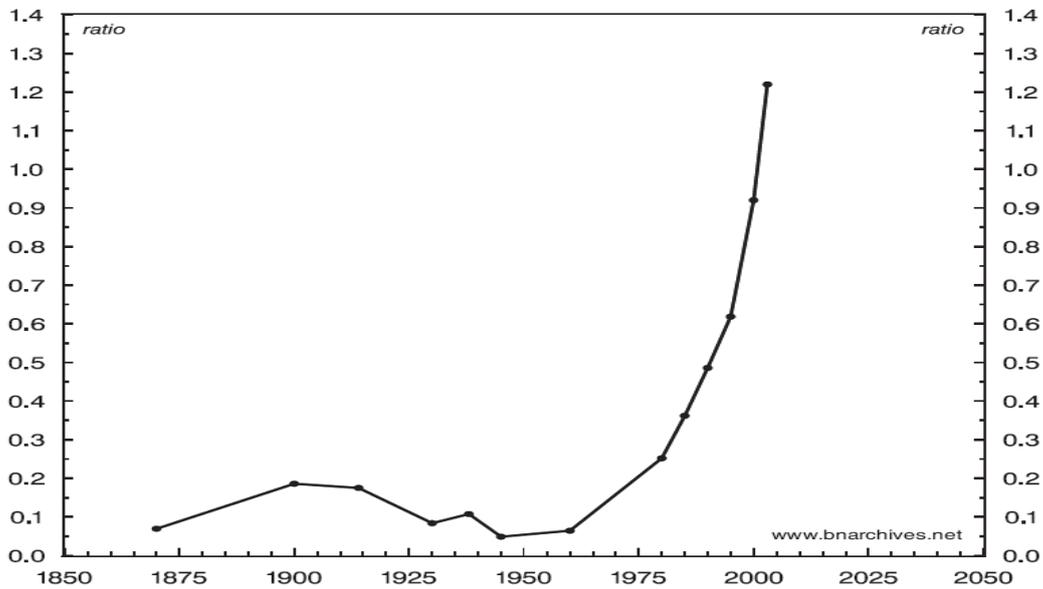
제국의 흥망성쇠는 언제 봐도 재미있는 이야기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 반복되어 온 지역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의 암투와 전쟁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지금까지도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바라보는 주류 시각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역사가 그냥 단순히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국제정치경제 문제를 국가 간 패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30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초국적화 되어 온 자본주의적 권력체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림 2. 전 세계GDP 대비 초국적으로 소유된 자본 비율

출처: Nitzan and Bichler, "Imperialism and Financialism", www.bnarchives.net

그림2는 세계적 차원에서 초국적으로 소유된 자본의 가치를 전 세계GDP에 대비해서 나타낸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80년대 이후로 이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경 0.2정도였던 비율이 현재는 세계GDP총량보다 1.2배 이상 큰 규모로 성장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Mapping Global Capital Markets, 2008: 73), 2006년 기준으로 세계 주식의 27퍼센트가 외국인 소유라고 한다. 1990년에는 9퍼



센트였는데, 이는 3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에 정부채권의 외국인 소유 지분은 11퍼센트에서 31퍼센트로 증가했고, 회사채의 외국인 지분은 7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자산 26퍼센트가 외국인 수중에 놓여 있다. 외국인 투자가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소유권의 초국적화의 진행 정도는 이들 숫자보다 훨씬 더 심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본의 초국적화가 의미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자본주의 권력 체제와는 달리 현재의 정치경제질서를 국가 간의 패권싸움이란 틀에서 논의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한국의 ‘자랑거리’ 삼성전자의 지분 47퍼센트가 외국인 소유

이다. 한국기업이라고 하기에는 개념상 다소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경제의 힘을 온전히 중국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초국적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금융/자산 시장의 초국적화가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의 대부분이 다른 나라 국가의 수중에 있다. 미국 대 중국이란 개념 틀에 맞춰 세계질서를 논하는 것은 이런 자본주의 권력체제의 변화를 제대로 고려 못하는 것이다.

물론 달러체제가 급격히 몰락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정부 간 공조체제와는 무관하게 사적시장에서의 패닉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누가 미국의 5대 투자은행들이 무너지리라 상상했는가? 권력은 합리성보다는 비합리적/비이성적 충동에 의해 흥하고 또 망한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자본주의 체제는 언제든지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 흔들릴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국제적 권력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예측을 해도 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맞출 순 없지만, 최소한 초국적으로 얽혀 있는 현재의 자본주의적 권력 형태로 봤을 때 어느 한쪽에만 이롭거나 해로운 패권싸움이 벌어지기 힘든 형국이라는 것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